

○ 사건명 :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감경 또는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이 유

I.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 ○○. 석유판매업 사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면 ☆☆리 ○○-○ ‘○○석유’라는 상호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18. ○○. ○. 한국 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2018. ○○. ○○. 사용오차가 850ml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을 통보 받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기에서 경유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전문 검사기관이 주유기의 봉인을 열어보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확인이 힘든 점, 주유기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으며 기존 봉인도 이상이 없는 점 등은 청구인에게 정량미달 판매의 고의가 없었음이 추단되며 이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것으로, 최초 2018. ○○.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검사 결과 사용공차 기준에 100ml미달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2018. ○○. ○○. KTC의 정량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된 것을 보면 검사기관에 따라 상이한 점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3기관의 검사 없이 단 1차례의 검사값으로 사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부당으로 취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시 침해되는 사익이 심히 크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물론 그 가족 전부가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이 심히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III.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42조(지도.감독) 위반이 명백하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1개월을 통보한 것으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 정당한 법 적용이라 할 수 있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V.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4. ○. ○○. 석유판매업 사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면 ☆☆☆리 ○○○-○ ‘○○석유’라는 상호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8. ○○. ○.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2018. ○○. ○○. 사용오차가 850ml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9. ○. ○○.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 후 2019. ○. ○.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고 하며, 그 제15호에서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 하며, 그 제8호에서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公差(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며,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3) 그 밖의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 위법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관련 사전절차 등을 거쳐 내린 행정처분에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정량보다 미달되어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서 보건데, 대법원은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18. ○○. ○○. 경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시 위 계량기의 사용오차가 벗어나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차후 2018. ○○. ○○. 경 피청구인 입회하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위 계량기를 측정할 때는 적합판정을 받았던 점, KTC 현장검사 당시 봉인 해제를 하거나 훼손된 흔적이 없었던 점, 동종의 위반사실이 없이 1차 위반인 점,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여진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